

총파업특보 10호

적폐를 도려내라 방통위, 방문진 검사 감독 전격 착수



‘공영방송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12년 이후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예산집행 내역,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자체 감사 자료 등을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 고시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해당 법인의 서류와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 감독, 사실상의 감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우선 책무는 ‘공영방송 정상화’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 회복을 위해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벌써 20일이 넘었다. 방송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 급급한 김장겸

과 경영진들로 인해, 국민의 것이어야 할 공영방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방통위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공영방송의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책무다.

‘무법지대’ 방문진... 존재 이유도 상실

그동안 방문진은 사실상 ‘무법지대’였다. 반복된 편파 왜곡 보도로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구 여권 이사들은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다. 수백 명의 MBC 구성원들을 일터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남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와중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부추겨왔다. 김장겸 사장이 보도 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시사 보도 부문의 문체를 제기한 경영평가보고서마저 폐기했다. 사실상 방문진이 MBC 경영진과 ‘한 몸’이자 ‘이익 공동체’였던 셈이다. 일찌감치 존재 이유를 상실한 방문진은

그러나, 보수 정권 시절 방통위로부터 책임 추궁이나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좌고우면’ 안된다... 촛불의 명령이다

방통위는 MBC 경영진의 ‘구사대’로 전략한 방문진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사·감독해야 한다. 방문진 이사들의 직무 유기와 위법 행위는 알려진 것만 해도 이미 차고 넘친다. 이번 방통위의 검사 감독 과정과 그 결과는, 그동안 강조해온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회복’은 단순히 MBC 구성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상식의 힘을 믿는 국민들과 ‘촛불 시민’의 명령이다. 방통위가 국회 국정감사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좌고우면한다면 이는 더 중대한 ‘직무 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MBC 구성원들은 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고영주 해임 사유 차고 넘친다

현재 방문진 구여권 그룹의 우두머리적인 고영주가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건 그 자체가 '코미디'다. 전현직 대통령들을 싸잡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모욕하는 극우 성향의 편향된 인사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방송을 감독하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이다. 과거 국정원과 정권의 언론장악 공작에 가담해 지금까지도 한 줌 정치세력에 기대어 따리를 틀고 있는 '적폐'들의 수장이다.

좋다. 이런 일마저 곧잘 신념으로 포장하거나, 애써 권력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정치 얘기는 집어치우자. 법대로 하자. 진작 이사장직에서 잘라버렸어야 할 이 부적격자의 법적 해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부당 징계·전보 방조

- 2012년 170일 파업의 보복 조치로 사측은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200여명에 대해 부당징계를 내리거나 부당전보했다. 대부분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난폭한 징계권 '남용'이다. 경영진이 망나니 같은 칼춤을 추는 동안 방문진은 사측의 위법한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부당징계와 부당전보 행위를 조장했다. 방문진법 제5조 2호 'MBC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0조 5호 'MBC의 공적 책임 심의·의결', 민법 6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해임사유다.

불법적 부당노동행위 비호

- 사측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엔 그 직접 증거인 <영상기자 블랙리스트>까지 폭로됐고, 국정원의 <MBC 언론장악 문건>도 공개됐다. 고영주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눈감는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경영진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소수 이사진들의 의견에 대해선 묵살로 일관했다.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도 '방문진은 MBC 노사 문제에서 제3자일 뿐'이라는 폐기된 악법을 들이대며 방문진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공정방송은 노조와 얘기할 근로조건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했다. 또 경영진이 '트로이카'로 노조 활동을 불법 사찰하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마저 거부했지만, 고영주는 오히려 이를 감싸고 대신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부당노동행위 직접 교사

-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조합원들을 '잔여인력', '유휴인력'으로 비하하면서 "앵커로 쓰지 말고 주요 뉴스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블랙리스트로 대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지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 81조 및 방송법 제4조와 제6조, 민법 제61조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자 해임 사유다.

인적자산 및 전문성 훼손

- 파업 이후 조합원 상당수가 일명 '신천교육대'에서 '브런치 교육' 따위를 받았다. 20년 차 베테랑 시사교양PD가 스케이팅장 빙질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유능한 아나운서가 이유 없이 '면벽 수련'을 당했다. <블랙리스트> 대상인 카메라 기자들은 소고기처럼 등급이 매겨져 관리됐다. MBC 자산인 구성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 직업과 무관한 분야에 강제 전보시켜 전문성을 훼손시켰다. 사측이 자행한 이런 해사 행위에 대해 이를 감독해야 할 고영주는 자신의 의무를 망기한 걸

넘어 '유휴인력' 운운하며 조장하기까지 했다.

조직붕괴·경쟁력 약화 방치

- 전문성이 반영된 직종을 폐지하고 5년간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면서 인사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다. MBC 조직체계의 근간이 붕괴됐고, 이념 편향적인 경영진이 편파·왜곡 보도를 주도하면서 뉴스는 '세월호'와 '최순실'을 미끼가고 '동물'과 '생활밀착형 주부아이템'에 점령당했다. 그 결과 특히 간판 보도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2%대까지 추락하고, 2010년까지는 4위를 유지했던 MBC 공정성 순위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도 MBC는 1% 미만의 굴욕을 당하고 있다. MBC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감독해야 할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 시민들은 MBC 뿐"이라며 경영진을 두둔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영주는 지역사 사장에게서 회사 공금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한우 선물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극우 편향적인 명예훼손 발언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 기소까지 돼, 방문진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고영주의 방문진'이 공영방송 MBC에 끼친 해악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다. 방문진법, 방송법, 노동조합법, 민법, 형법까지 어긴 고영주는 이제 끝이다. 방문진 검사에 착수한 방통위가 이런 무법천지 고영주를 해임하지 못한다면, 공영방송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영망진창 '식물' 방문진, 검사감독 자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도 "할 수 없다" 말바꿔

제작거부와 과업의 도화선이 됐던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이사진과 경영진은 아무런 반성도, 의지도, 대책도 없다. 경영진은 블랙리스트가 나왔을 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정체불명의 문건'이니 '허위사실 유포'니 떠들어댔다. 실제 작성자가 나오자, 경영진은 하루 만에 '전사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짓으로 들통이 났다. 이날 열린 방문진 회의에서 구 야권 이사진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백종문 부사장은 "과업 중이라 인력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에당초 블랙리스트 가해자인 사측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게 어불성설이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건 결국 당장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쇼'였음이 드러났다. '과업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란 핑계도 말이 안된다. 꾸리긴 했다는 진상조사위나 당장 감사실 인력들만 동원해도, 최소한 이미 자수한 최초 작성자를 조사해, 보고선과 활용범위 등의 기초 조사라도 벌일 수 있다. 그런데도 과업 운운하며 못하고 있다는 건 자신들의 '불법'과 '인격 살인'의 죄상이 조금이라도 밝혀질까 두려워서다. 은폐하기 위해 뭉개는 것이다.

무능한 이사진 그리고 무책임한 경영진, 이들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자초했다. MBC의 끝모를 추락을 그동안 방관하고 조장한데 이어, 지금은 사태 해결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들은 MBC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트리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하라는 감독은 안하고, MBC를 망가트린 '김장겸 일당'을 비호하는데 급급하며 공영방송 MBC의 추락을 방치해왔다. 나아가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등을 부추기고, 편향적인 방송을 조장해온 공정방송 말살의 공범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능력이나 의지가 시쳇말로 '1'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목요일(21일) 방문진 회의만 놓고 봐도 그렇다.

야권 이사진들은 "경영평가보고서를 폐기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방문진의 공식 입장을 밝히자"고 했지만, 구 야권 이사진들은 '폐기한 건 아니라'는 식의 망각인지 착란인지 모를 자기 부정만 되풀이했다.

2주 만에 '파업 대책' 보고... "해결 방법이 없다"

방문진 이사진들은 이날 과업 대책도 보고 받았다. 과업 돌입 17일만이다. 지난 7일 열린 방문진 회의에서도 '과업 대책'은 첫 번째 안건이었지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이사진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고영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마무리한다"며 사실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

2주만에 뒤늦게 대책을 보고 받은 이사진들도 문제지만, 대책을 보고한 경영진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백종문 부사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이사진 질문에 "풀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실토한 것이다. 구 야권 이사진들이 뒷짐 지며 과업 장기화를 방관하는 사이, 경영진은 사태 해결에 무능과 무의지로 뻘대고 있는 것이다.

경영평가보고서, 폐기해놓고 안했다?

파업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방문진 회의는 구야권 이사진들의 정신착란 같은 촌극으로 시작했다. 이미 2주 전 회의에서 구 야권 이사진들이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시킨 '2016년 경영평가보고서'를 구 야권 이사진들이 다시 논의하자고 나온 것이다. 해당 '경영평가보고서'는 김장겸 보도본부장 시절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추락했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외면했음을 지적한 내용으로, 채택되면 현 김장겸 사장이 책임져야 할 아킬레스건이다. '김장겸 사수대' 노릇을 하는 구야권 이사진들이 해당 보고서를 구 야권 이사진들의 거센 반발에도 전례 없이 일방 폐기했던 이유다.

그런데 2주만에 이들이 180도 입장을 바꿔 '다시논의하자'고 나왔다. 왜 그럴까? '경영평가'는 방문진법에 명시된 방문진 이사진들의 의무이고, 매년 채택 해왔다. 그런데 '김장겸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례도 없이 털썩 폐기 처분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진 건 물론 위법 논란까지 일었다. 구



김원배·이진숙도 사퇴! 전국 조합원 한 목소리

대전 '돌마고' 현장



대전 시내 한복판이 커다란 함성 소리로 울려퍼졌다. 퇴근길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재기발랄한 음악과 율동에 빠져들었다. MBC 총파업 18일째인 지난 21일, 김장겸과 '낙하산' 사장들을 몰아내기 위한 제 2회 대전 '돌마고' 문화제가 대전 교보문고 거리에서 치러졌다.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시민 등 6백여 명이 거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낙하산 사장 철폐를 외쳤다.

특히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분노는 남달랐다. 이번 행사가 열린 대전은 '적폐 중의 적폐'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제 3단계 '민영화'를 위해 발 벗고 뛰던 이진숙이 바로 대전 MBC사장이다. 2012년 170여 일간의 파업투쟁 당시 '김재철의 입'으로 불리며 탄압을 진두지휘하더니, 2015년 대전 MBC사장으로 '꽃힌' 것이다. 사장으로 취임해서도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징계만 남발했다. 지역 현안은 내팽개치고 엉뚱

한 '중동뉴스'로 방송을 사유화했다.

'50년째 친박'인 김원배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사로 재직하며 공영방송 MBC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과거 목원대 총장 재임시절엔 교비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재수사를 받고 있다. 이한신 대전지부장은 "이런 적폐 인사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

이날 돌마고 행사엔 김민식PD와 '블랙리스트' 가수 김장훈 씨도 함께했다. 김장훈씨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조합원에게 치킨 100마리를 선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지부와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사퇴와 총장시절 교비횡령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성명]

해임 필요성 자복한 MBC 경영진, 더이상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김장겸 경영진이 MBC의 파업 사태를 풀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MBC 경영진을 대표해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석한 백종문 부사장은 MBC 파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단협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사회 이슈화가 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로 자신들이 얼마 전 공식입장까지 내가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영상기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파업에 들어가 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실토했다.

사실상 자기 입으로 김장겸 사장과 본인을 비롯한 MBC 임원들이 해임되어야 하는 근거를 자복한 것이다. 치밀하게 MBC 파괴 공작을 저질러온 자들이 형식적인 단협 요청 공문 몇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파업을 풀 방법이 없으니, 파업때문에 진상조사를 못한다니, MBC 경영진의 불쌍사나운 남탓은 결

국 조직 관리 능력과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KBS 김환영 사장이 해임된 이유를 기억하는가?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침해해 세월호 보도 참사를 불렀고, 이에 항의하는 KBS 구성원 다수가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수습하려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능력과 직무수행능력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에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해임사유였다.

김장겸 경영진의 방송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 침해와 보도 개입은 더욱 심각했던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더구나 국정원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시나리오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더욱 악랄하다. 이런 MBC 파괴 공작에 분노한 2천 구성원들이 유례없이 강도높은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환영 사장은 조직관리와 운영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기라도 했다. 그런

데 김장겸 경영진은 조직관리 및 운영 실패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경영능력을 상실했다며 본인들이 퇴진하거나 해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본인들이 역설하고 있는데 더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 감독에 들어가며 MBC의 파업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 김장겸 경영진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국민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법적 의무와 권한에 따라 한 시라도 빨리 MBC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2017년 9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